

통일교육의 새로운 관점 : 평화와 민주적 가치는 통일교육과 어떻게 만나야 할까

권 숙 도*

•요 약•

최근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인식변화는 기존의 통일교육이 제대로 역할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에 다시 한번 통일과 통일교육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평화와 민주주의라는 보편적 가치가 한반도의 통일이라는 특수한 가치와 어떻게 결합되어야 할 것인지는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통일논의에서 평화와 민주적 가치가 어떤 함의를 갖는지를 탐색한 후, 평화와 통일, 그리고 민주적 가치가 연계할 수 있는 통일교육의 새로운 방향으로 사회적 대화를 제안하였다. 우리가 새롭게 만들어가야 할 통일교육은 분단이 가져온 구조적 모순과 문제점들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통일의 필요성과 통일과정으로 나아가는 방향에서 평화와 민주적 가치를 통해 참여하고 숙의할 수 있는 공론장(public sphere)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통일교육은 통일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와 합의를 준비하는 과정이다. 통일교육이 없이도 통일은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 통일교육이 없이는 제대로 된 통일이 이루어질 수는 없다. 이런 점에서 평화와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통일교육의 체계를 재설계하고 구조화하려는 고민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주제어 : 통일교육, 평화교육, 민주시민교육,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 사회적 대화

I. 서론

통일은 서로 분단 상태에 있는 국가가 현재의 분단 상태를 극복하고 하나의 정치공동체로서 국가를 건설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¹⁾ 분단 이후 우리는 오랫동안 통일을 이야기

*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해 왔으나, 현재 상황을 보면 과연 통일이라는 가치가 국민들에게 얼마나 와닿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통일 문제 전반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 인식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이 매년 발표하고 있는 「통일의식조사」의 2024년 결과에 따르면 통일의 필요성이나 통일에 대한 견해, 통일의 시기에 대한 문항 모두에서 2007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의 응답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매우’와 ‘약간’을 합해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36.9%로 조사 이래 가장 낮은 수준으로 하락한 반면 ‘전혀’와 ‘별로’를 합해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35.0%로 조사 이래 가장 높은 수준으로 상승하였다. 반면 ‘통일에 대한 견해’와 관련하여 ‘여건이 성숙되기를 기다려 점진적으로 통일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은 45.6%로 조사 이래 최저 수준으로 하락한 반면, 남북이 사실상 두 개의 국가로 분단된 ‘현재대로가 좋다’는 응답은 31.2%로 조사 이래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 ‘통일의 시기’에 대한 문항에서는 ‘통일이 불가능하다’는 응답이 39.0%로 역시 조사 이래 가장 높은 수준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²⁾ 물론 2025년 조사에서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일정 부분 긍정적 인식이 나타나기도 했지만,³⁾ 전반적으로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심화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무엇보다 20대와 30대를 중심으로 부정적 인식이 증가 추세에 있는 점, 그리고 통일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분단체제인 ‘현재대로가 좋다’는 응답과 ‘통일이 불가능하다’는 응답이 상당히 높다는 점은 우리가 결코 간과해서는 안되는 인식의 변화라고 할 것이다.

또 통일보다 ‘평화로운 분단’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고 있는 것도 주목해야 할 변화이다. 민주평통의 2023년 조사에 의하면 한반도의 미래상을 ‘통일된 단일국가’로 응답한 비

1) 박영균, “남북의 통일원칙과 통일과정의 기본가치: 민족과 평화”, 『시대와 철학』 제25권 제2호(통권 67호), 한국철학사상연구회, 2014, p.113.

2) 이러한 결과는 2024년까지 지속된 남북한 갈등과 긴장 상황으로 통일의 필요성과 통일이 가져다 줄 이익에 대한 기대감, 통일의 가능성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김범수 외, 『2024 통일의식조사』, 서울: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24.

3) 2025년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전년 대비 4.2%p 증가한 41.1%였으며, ‘필요하지 않다’는 4.6%p 하락한 30.4%였다. 한편 ‘여건이 성숙되기를 기다려 점진적으로 통일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은 47.4%로 2024년에 비해 다소 상승하였으나, 반면 ‘현재대로가 좋다’는 응답 역시 30.6%로 2007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통일가능 시기와 관련하여 ‘통일이 불가능하다’는 응답은 35.6%로 나타났다. 김범수, “통일에 대한 인식”, 『(2025 통일의식조사) 이재명 정부 출범과 신냉전 위기: 대북정책 기대와 전망』, 서울: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2025. 10.1.), 2025, pp.11-13.

율은 28.5%였으나 ‘자유로운 왕래가 가능한 두 국가’로 응답한 비율은 52.0%로 거의 두 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⁴⁾ 이는 절반 이상의 국민들이 통일국가가 아니라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분단상태’를 바람직한 미래상으로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국민들의 통일인식에 상당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통일인식의 변화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 통일인식의 변화에 대한 최근 조사 결과에서 주목할 점은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관심이 낮아지는 것도 문제지만, 무엇보다도 자유로운 왕래가 가능한 두 국가 체제를 희망하는 등 통일에 대한 인식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인식 변화는 결국 기준의 통일논의와 통일교육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기준의 통일논의가 “과연 지금 우리에게 통일은 어떤 의미인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제대로 형성하지 못하였고, 통일교육이 그 의미를 함께 만들어 내는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이다.

최근 남북관계는 전환점에 서 있다. 분단 이후 남북간의 대화가 최장기간 단절된 속에서⁵⁾ 북한은 2023년 12월 말 남북관계가 ‘적대적 두 국가’임을 선언하였다.⁶⁾ 이런 상황에서 2025년 새롭게 출범한 한국과 미국의 새 행정부는 다양한 방식을 통해 남북관계의 개선과 전환 의지를 천명하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남북관계와 통일문제에 대한 새로운 인식 전환이라 할 것이다. 다시 한번 우리가 ‘왜 통일을 이야기해야 하는지, 통일논의는 어떤 가치들과 함께 논의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이를 위해 통일교육은 어떤 과정과 방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시작할 필요

- 4)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2015년부터 분기별로 『통일 여론·동향』 보고서를 발간해 오고 있는데, 이 중 2023년 2분기 보고서에 한반도 미래상에 대한 조사 결과가 반영되어 있다. 조사에 따르면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응답은 73.7%로 나타났으며, 한반도의 미래상으로 ‘자유로운 왕래가 가능한 두 국가’라는 응답이 52.0%로 ‘통일된 단일국가’ 응답인 28.5% 보다 훨씬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이 결과를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별 구분으로 나누어 보면 통일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집단에서도 바람직한 남북의 미래상으로 ‘자유로운 왕래가 가능한 두 국가’ 선호도가 과반에 달해(48.6%), 전체적으로 두 국가 선호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집단 가운데에서는 ‘자유로운 왕래가 가능한 두 국가’에 대한 선호가 62.4%로 더욱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평통, 『통일 여론·동향(2023년 2분기)』, 서울: 민주평통, 2023.
- 5) 남북 당국 간의 대화는 2018년 12월 14일 평양선언 이행을 위한 실무 차원의 체육분과회담을 마지막으로 현재까지 약 6년 11개월 가량 끊어진 상태이다. 이는 1971년 남북 적십자 회담을 시작으로 이루어진 남북 대화의 역사에서 가장 장기간의 대화 중단 상태이다. 김연철, “달라진 세계, 새로운 평화·통일”, 『평화, 다시 시작!』, 6.15 남북 공동선언 25주년 학술회의 및 ‘민주정부 한반도 평화 계승 발전 협의회’ 발족식 자료집, 2025, p.28.
- 6) 2023년 12월 말 조선노동당 제8기 9차 전원회의를 통해 김정은은 남북관계를 “더 이상 동족 관계, 동질 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로 규정하면서, 통일노선의 전면 전환을 선언하였다. 권숙도, “김정은 시대 북한 외교정책의 변화와 특징: 수정주의적 관점을 중심으로”, 『한국정치연구』 제34집 제1호,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2025, p.158.

요가 있는 것이다.

이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 위에서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의 통일과 통일교육에 대한 논의 과정을 살펴보고, 통일논의와 통일교육은 평화와 민주주의라는 가치가 함께 결합되어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하고자 한다. 그리고 평화와 민주주의라는 가치가 결합된 통일 교육의 실행체계에 대한 구상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II. 통일과 통일교육을 바라보는 관점

1. 기존 통일논의의 비판적 검토

그간의 통일논의에 대해서는 여러 관점에서 평가할 수 있겠으나, 여기에서는 기존 통일논의의 기본적 전제인 민족 동질성이라는 개념 자체가 근본적으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음을 설명하고자 한다. 모두가 동의하듯이 지금까지의 우리의 통일논의를 관통하는 가장 큰 주제는 바로 ‘하나의 민족’이라는 명제에 근거한 민족주의라는 개념이다. 한마디로 다소 거칠게 표현한다면, “우리는 한 민족으로 유구한 역사를 함께 해 왔으나 일시적으로 분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반드시 다시 통일을 해야 한다”는 논리구조 위에서 그동안 통일 논의를 진행해 온 것이다.

민족주의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전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쳐 온 강력한 정치이념이다. 민족주의의 의미와 기원을 어디에서 찾든지 간에, 민족주의가 근대 국민국가(nation state)들의 국가건설 과정과 사회통합 과정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 온 것은 분명하다. 사회통합과 국가건설을 위해서는 그 공동체만의 특별하고도 깊이 있는 유대감을 형성하는 것이 필요했는데, 이것이 바로 공통의 민족 정체성인 것이다. 이처럼 근대 국민국가들은 민족주의를 통해 영토 안에 있는 모든 계급을 포괄하는 정치공동체를 만들어 온 것이다.⁷⁾

이처럼 민족주의는 기본적으로 사회통합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기제이며, 다른 정치사상이나 세력과도 쉽게 결합될 수 있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민족주의에 대한 강조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한반도에서 민족주의는 근대화와 분단을 거치며 20세기 한국 역사를 이끌어 온 핵심 동력으로 역할을 하였다. 민족주의를 토대로 독립운동도 이루

7) 공동의 정체성, 사회통합을 형성하는 방법으로서의 민족적 정체성의 역할은 나종석, “민족주의와 세계시 민주의: 자유주의적 민족주의를 중심으로”, 『헤겔연구』 26호, 한국헤겔학회, 2009, pp.181-185 참고.

어졌으며, 국가 건설과 경제 부흥도 이루어졌고, 통일을 위한 노력과 시도도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이다.⁸⁾

이런 점 때문에 민족주의는 우리의 통일논의에서도 오랜 기간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 우리 정부의 공식적 통일방안인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기본적으로 같은 민족이라는 정체성에 기반하고 있다. 남북이 같은 민족으로서 경제·사회·문화공동체를 형성하고, 궁극적으로는 정치적 통합을 통해 정치공동체를 달성함으로써 ‘1민족 1국가’의 통일국가를 완성한다는 것이다.⁹⁾ 뿐만 아니라 그동안 이루어진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한 정상이 합의하여 발표한 여러 선언문에서도 모두 ‘민족’이라는 개념이 핵심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다.¹⁰⁾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지향하는 통일의 최종 미래상은 바로 ‘민족공동체의 실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¹¹⁾

하지만 최근 들어 민족주의 중심의 통일논의에 대한 비판적 시각과 함께 통일논의에서 민족주의적 시각을 넘어설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높아지고 있다. 국립통일교육원(현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이 매년 발간하는 통일교육 기본교재에서도 “분단으로 인해 굴절된 역사를 바로잡고 민족의 역량을 극대화하는 새로운 민족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해 통일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 다만 오늘날 국가 간 이동이 증가하면서 우리 사회 역시 다문화 사회로 나아가고 있음을 고려할 때, 민족공동체는 협연적 의미에 한정하기보다는 한반도의 삶의 양식을 공유하는 문화적 측면도 함께 담아내는 열린 공동체를 지향할 필요가 있다”면서,¹²⁾ 민족공동체에서 더 나아가 열린 공동체로의 지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통일논의에서 민족주의적 시각을 벗어나야 하는가? 우선 하나의 민족, 민족의 동질성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통일논의를 진행하다 보면, 이것이 통일을 위한 목표와 과제임은 물론이고 통일의 기대효과로도 강조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

8) 차승주, “‘민족주의’적 통일교육의 한계와 대안: 세계시민주의의 관점에서”, 『평화학연구』 제24권 제3호, 한국평화연구학회, 2023, p.104.

9) 국립통일교육원, 『2025 통일문제 이해』, 서울: 국립통일교육원, pp.15–16.

10)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 2007년 ‘10.4 선언(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2018년 ‘판문점 선언(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에는 모두 ‘민족’이라는 개념이 핵심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다. 차승주, 앞의 논문, p.105; 첫 번째 정상회담인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 제1항은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가장 최근의 정상회담인 2018년 9월 ‘평양공동선언’ 서문에는 “양 정상은 민족자주와 민족자결의 원칙을 재확인하고, 남북관계를 민족적 화해와 협력, 확고한 평화와 공동 번영을 위해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고 명시하고 있다.

11) 차승주, “교과서에 나타난 통일담론에 대한 고찰: 민족주의를 중심으로”, 『윤리교육연구』 29집, 한국윤리교육학회, 2012, pp.481–482.

12) 국립통일교육원, 앞의 책, pp.15–16.

지만 ‘동질성의 회복’이나 ‘민족공동체 의식의 함양’을 중심에 두고 강조하다 보면 자칫 분단 이전 남북이 함께 공유하고 있던 전통문화 잔재에 대한 복원, 과거 권위주의적 위계질서에 기반한 사회체제나 가부장적 문화에 대한 동의와 계승으로 연결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것이다.¹³⁾

무엇보다 큰 문제는 ‘민족’의 가치를 우선시하면서 ‘민족동일성’이나 ‘동질성’을 강조하다 보면 남과 북이라는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둘’의 실체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같은 민족’이라는 동일성의 환상이 남과 북의 ‘차이’를 억압하고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둘’을 하나로 통일시키는 가장 빠른 방법은 서로간의 차이를 배제하고 상대방을 자신에게 일치시키도록 강요하는 것이다. 따라서 ‘같은 민족’이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이러한 행위는 역설적으로 다른 대상의 존재를 부정하고, 남과 북 간의 차이를 억압하는 ‘폭력’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¹⁴⁾

이처럼 민족 동질성을 강조하고 다시 복구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통일을 내세우다 보면 통일논의 과정에서 존재할 수밖에 없는 다양한 의견들을 무시하고, 오직 하나의 가치만 내세울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민족 중심의 통일논의는 역설적으로 폭력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통일과 함께 논의되어야 할 새로운 가치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추상적이고 모호한 민족이라는 개념을 넘어 우리가 지향하는 실질적인 통일의 미래상과 연관될 수 있는 가치들을 통일과 함께 논의하여야 할 것이다.

2. 통일교육의 목적과 필요성

현재 우리의 통일교육은 「헌법」과 「통일교육지원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고 있다.¹⁵⁾ 남북분단 상황 속에서 통일에 대한 국민적 의식 함양과 올바른 가치관 정립을 위해 1999년 제정된 「통일교육지원법」 제2조에서는 ‘통일교육’을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루는 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13) 차승주, 앞의 논문, 2023, pp.108-109.

14) 박영균, 앞의 논문, pp.132-133.

15) 통일교육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중략) 밖으로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을 천명한 「헌법」 전문과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규정한 「헌법」 제4조의 정신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통일부 통일교육원, 『평화·통일교육: 방향과 관점』, 서울: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8.

기르도록 하는 교육”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3조에서는 “통일교육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고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여야” 하며, “개인적·당파적 목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기본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는 「통일교육지원법」에 근거하여 정부의 주도로 학교에서, 또 사회에서 통일교육을 해 왔다. 이는 한편으로는 통일을 간절히 염원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좀 더 비판적으로 본다면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해 온 것이기도 하다. 지금까지의 우리의 통일교육은 주로 통일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다. 남과 북이 ‘하나의 민족’이기 때문에 통일이 필요하다며 통일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경제적 측면에서 통일의 편익을 부각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온 것이다.¹⁶⁾ 하지만 문제는 통일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변화에서 보듯이 변화하는 사회경제적 환경 속에서 이러한 교육 방식에 대한 동의 수준은 한계에 달하였다는 점이다.

이러한 실효성의 문제는 결국 통일교육의 현실이 변화하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할 뿐 아니라 그 목적과 기본원칙을 현장에 적용하는데 있어 근본적인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을 낳고 있다. 통일교육의 실효성 부족에 대한 원인은 크게 두 가지 입장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 통일교육의 목표와 기본원칙이 다소 추상적일 뿐만 아니라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¹⁷⁾ 무엇보다도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통일교육이 「통일교육 지원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미래지향적 통일관, 전전한 안보관, 균형있는 북한관 정립’이라는 범주 내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2030 세대의 통일에 대한 생각과 정서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¹⁸⁾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지점이라 할 수 있다.

두 번째, 개인적·당파적 목적으로 통일교육을 이용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하면서도 정부가 바뀔 때마다 수시로 통일교육의 목표가 변경되고 있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분단 이후 우리의 통일교육은 정부의 정책적 방향에 따라 반공교육, 안보교육, 승공교육, 통일 안보교육, 평화교육, 평화·통일교육 등으로 명칭과 기본방향이 다양하게 변화해 왔다. 이러한 변화는 통일교육의 지향점이 정부의 대북·통일정책의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해 온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결국 통일교육이 일관성 있게 이루어지는 것을 어렵게 하

16) 윤철기, “평화통일교육의 새로운 콘텐츠 개발: 국가폭력 역사와 ‘기억의 정치’를 중심으로”, 『도덕윤리과 교육』 제86호, 한국도덕윤리과교육학회, 2025, p.286.

17) 체진원, “민주시민교육과 통일교육의 관계모델 탐색: 관계유형과 사례논의의 시사점”, 『한국과 국제사회』 제7권 제6호, 한국정치사회연구소, p.1094.

18) 조정아, “2030 세대의 통일의식과 통일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통일교육연구』 제15권 2호, 한국 통일교육학회, 2018, p.31.

였다.¹⁹⁾ 이는 통일교육이라는 것이 그 성격상 정치적 변화에 민감할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그동안의 분단 현실에서 지속적이고 일관된 내용과 방향을 수립해 나가지 못하였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하겠다.²⁰⁾

이런 점에서 그동안 통일을 이야기하고 통일을 위해 통일교육을 진행해 왔지만, 통일의 필요성을 당위적으로 주장해 오는 것 이상을 넘어서지 못하는 기준의 통일교육 방식이나 내용이 얼마나 올바른 것이었으며 실효적인 것이었는지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남북관계에서 “같은 민족이지만 서로 전쟁을 한 군사적 적이자 동시에 이 테울로기적 적”이기에 나타나는 “통일을 외칠수록 통일에서 멀어지고 분단 극복을 외칠수록 분단 현실이 강화된다는 역설”에 대해 지적하면서 “절대에서 공존, 통일에서 평화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제안한 한 연구자의 지적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²¹⁾

III. 평화와 민주적 가치, 그리고 통일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통일에 대한 관심이 낮아지고 있을 뿐 아니라 자유롭게 왕래하는 두 국가 체제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는 등 통일문제에 대한 인식 자체가 달라지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정부 주도의 통일교육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또 민족 동질성 회복이라는 지향점만을 추구하면서 통일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의견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기준의 통일논의의 역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과연 지금 이 시대 통일과 함께 우리에게 중요하게 논의되어야 할 가치는 무엇인가? 그동안의 통일논의는 민족을 가장 중심에 놓고 진행되어 왔지만, 우리가 통일을 해야 하는 이유가 단순히 같은 민족이기 때문이다. 결국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단순히 통일을 위한 통일논의가 아니라, 분단이 가져온 우리 사회의 구조적 갈등을 해소하고, 민주적 가치를 중심에 두고 앞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 어떠한 형태로의 통일을 이루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
- 19) 김병연, “평화 지향적 통일교육과 안보 지향적 통일교육의 연계성”, 『윤리교육』 제145권, 한국윤리학회, 2024, p.180.
- 20) 김용신, “한반도 통일과 통일교육에서 평화의 의미”,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국제지역연구』 제27권 1호, p.47.
- 21) 김상준, “코리아 양국체제: 한 민족 두 나라 공존을 통해 평화적 통일로 가는 길”, 『한국사회학』 제52권 제4호, 한국사회학회, 2018.

이러한 점에서 지금 우리 사회의 통일논의를 풀어나가기 위해서 가장 우선되어야 할 가치는 바로 ‘평화’와 ‘민주시민’으로서의 ‘민주적 가치’ 존중의 자세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논의를 좀 더 진전시켜 보자.

1. 통일논의에서 ‘평화’의 함의

먼저 통일논의에서 ‘평화’라는 개념이 어떠한 함의를 가지는지에 대해 살펴보자.

평화를 문자 그대로 이해해 보면 상호간에 무력 충돌이 일어나지 않은 상태, 즉 폭력의 부재, 전쟁의 부재를 의미한다. 이를 우리는 ‘소극적 평화(negative peace)’라고 한다. 하지만 평화가 단순히 폭력이나 전쟁이 없는 상태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최근 들어서는 전쟁 이외에 다양하고 광범위한 문제들로 개념을 확대하기 시작하여, 빈곤이나 기아, 환경, 기후변화 등 과거에는 평화와 연관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사회의 여러 문제들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확장되고 있다. 이것을 우리는 ‘적극적 평화(positive peace)’라고 한다.

이러한 평화의 개념은 노르웨이의 평화학자인 갈퉁(Johan Galtung)에 의해 개념화되었는데, 갈퉁은 평화의 저해 요인인 폭력의 유형을 세 가지로 구분하면서 그에 기반하여 평화의 유형을 구분하고 있다. 먼저 직접적 폭력은 행위자들간에 의도적으로 일어나는 폭력의 행사를 의미하며, 구조적 폭력은 당사자들이 인지하지 못하거나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사회적 조건으로서 폭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한다. 빈곤과 기아, 독재, 사회적 소외, 경제적·사회적 불평등 등이 그 예가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문화적 폭력은 직접적인 폭력이나 구조적 폭력을 정당화하거나 합법화하는 신념, 가치, 이데올로기 등과 같은 모든 형태의 지적·문화적 활동을 의미한다. 이러한 폭력의 개념들을 평화의 개념에 접목해 보면, 소극적 평화는 직접적 폭력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하며 적극적 평화는 구조적, 문화적 폭력이 제거된 상태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²²⁾

갈퉁에 의하면 평화는 정태적으로는 ‘폭력이 없거나 현저하게 감소된 상태’를 의미하며, 동태적으로는 ‘갈등을 비폭력적이고 창조적인 형태로 변형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갈퉁은 평화의 의미를 직접적 폭력의 부재라는 소극적인 의미에서 구조적 폭력의 부재라는 적극적인 의미로 확대하였고, 이렇게 확장된 개념을 적극적 평화로 규정하였다. 그에 의하면 소극적 평화는 전쟁을 비롯한 직접적 폭력이 없는 상태로, 힘에 의한 질서가 만들

22) Johan Galtung, Peace, Research, Education, Action, *Essays in Peace Research*, Vol.1, Copenhagen: Cristian Ejlers, 1975, pp.111–130.

어져 거기에 순응하고 침묵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따라서 외부의 개입이나 환경 변화에 따라 언제든 깨어지기 쉽고 일시적인 경우가 많다는 특징이 있다.

반면 적극적 평화란 구조적, 문화적 폭력이 제거된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개념이다. 갈통은 적극적 평화를 구조적 평화와 문화적 평화 두 가지 개념으로 다시 구분하고 있는데, 구조적 평화는 사회·경제적 차별과 같은 갈등이 부재하여 사회구성원들의 존엄성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며 조화롭게 살아가는 상태를 의미하며, 문화적 평화는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구조적 평화를 자연스럽고 지속가능하게 하는 태도와 관행이 내면화된 상태를 의미한다.²³⁾

갈통에 의하면 폭력이 무조건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며, 양면성을 지닌다. 그는 구조적 폭력을 다루기 위한 ‘갈등의 구조’에 주목하고 있는데, 즉 갈등은 한편으로는 파괴적인 에너지가 될 수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긍정적인 창조적 동력이 될 수도 있으므로 갈등을 좀 더 발전적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갈등 자체가 항상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며, 갈등이 평화적으로 해결될 경우 오히려 더 발전적이고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갈통의 평화와 폭력 개념을 우리 한반도와 통일문제에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 소극적 의미에서 평화를 이해한다면, 평화란 갈등이나 분쟁 상태가 아닌 폭력의 부재 상태를 의미하기 때문에 단순하게는 현상유지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 경우 남북관계에서의 평화란 단순히 현재의 분단체제를 관리하는데 머무를 수 있다.

하지만 남북관계는 「남북기본합의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이다.²⁴⁾ 따라서 단순히 소극적 평화 개념을 중심에 두고 분단체제를 관리한다면 이것은 ‘민족의 대표성’을 두고 서로 경쟁하는 두 분단 국가간의 경쟁 패러다임 속에서 세력균형을 위한 군비경쟁과 같은 ‘안보담론’과 결합되어 오히려 갈등과 경쟁을 강화하는 경향을 낳을 수밖에 없다.²⁵⁾ 이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평화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²⁶⁾

결국 한반도와 통일문제에 평화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소극적 평화가 아닌 적극

23) Johan Galtung, “Violence, Peace, and Peace Research”, *Journal of Peace Research*, Vol. 6, No.3, 1969, pp.167–191.

24) 1991년 12월 13일 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 전문에는 “쌍방 사이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고 명시되어 있다.

25)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통해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힘에 의한 평화’ 논리가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방점 잘못 찍은 ‘힘에 의한 평화’...‘여러다 전쟁’ 불안감만 고조”, 『경향신문』(온라인), <https://www.khan.co.kr/article/202411112144005>(검색일: 2025.10.21).

26) 박영균, 앞의 논문, p.123.

적 평화, 갈퉁이 말하는 ‘구조적이고 문화적인 폭력이 없는’ 평화 개념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그동안 오랜 분단체제 하에서 양산된 우리 사회의 이념적 갈등구조는 개개인의 사상적 자유를 보이지 않는 구조 속에서 억압하는 구조적 폭력으로 작용되어 왔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더 나아가 이러한 구조적 폭력이 당연한 것으로 인식되는 문화적 폭력 구조를 창출하였다. 즉 우리는 분단상황에서 군사비나 체제유지비와 같이 분단 유지를 위해 직접 지불하는 유형의 분단비용에 대한 인식을 넘어 북한과의 안보대결을 구실로 이루어져 왔던 수많은 민주주의의 지체 경험들과 이산가족들의 보이지 않는 고통과 같이 분단으로 인해 사회 전 영역에서 발생해 왔던 무형의 분단 비용들이 바로 구조적이며 문화적인 폭력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²⁷⁾

그러므로 우리에게 분단을 극복한다는 것은 우리 일상 전반에 스며들어 있는 직간접적 인 폭력적 구조의 해체까지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분단체제 하에서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로 나아가는 과정 자체가 바로 구조적이고 문화적인 폭력을 극복하고 적극적 평화로 나아가는 과정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다. 통일논의에서 평화라는 가치의 의미는 결코 간단하거나 한 마디로 정의내릴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다.

2. 통일논의에서 ‘민주적 가치’의 함의

평화에 못지않게 통일논의에서 함께 추구하여야 할 가치는 바로 민주주의이다. 민주주의라는 구조적 토대 없이는 한반도의 상황은 언제든 평화와 통일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민주주의라는 가치는 통일논의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논의해 보자.

첫째, 민주적 가치는 우리 내부의 갈등과 문제들을 풀어가는 방식으로 의미를 가지며, 또 가져야만 한다. 1953년 휴전으로 시작된 분단은 현재까지 기약없이 장기화되는 상황이며, 오히려 남북 간의 갈등구조는 냉전 시기 못지않게 더 첨예화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남북관계 상황을 반영한 우리 사회 내부의 갈등구조는 더욱 심화되고 다층화되고 있다.²⁸⁾ 이런 점에서 이제 통일문제는 단순히 통일이 필요하다는 당위적 가치만으로는 절

27) 전쟁과 분단이 우리에게 남긴 기억, 억압된 트라우마, 구조적 폭력을 설명한 대표적인 연구로는 김동춘 (2006)이 있다. 김동춘, 『전쟁과 사회: 우리에게 한국전쟁은 무엇이었나?』, 펴주: 돌베개, 2006. 또 최근 윤철기(2025)의 연구도 분단으로 인한 국가폭력의 사례를 잘 설명하고 있다. 윤철기, 앞의 논문, 2025, pp.285–308.

28)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4 사회통합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 사회의 갈등 정도는 4점 만점에 3.04 점으로 국민이 느끼는 사회갈등 정도를 살펴보는 항목 조사가 시작된 201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보

대 사회 구성원들의 공감대나 동의를 이끌어 내지 못하는 주제가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사회 내부에서 첨예화된 이념갈등을 극복하고, “왜 통일이 필요한지, 우리가 추구하는 통일 한반도의 미래상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통일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유무형의 통일비용들을 우리는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를 함께 논의하는 과정이다. 그리고 그 과정은 우리가 추구하는 민주주의 통일국가를 준비하는 절차이자 단계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이러한 과정에서 필요한 것이 바로 ‘민주시민’으로서의 ‘민주적 가치’, 즉 민주주의라고 할 것이다.

둘째, 민주적 가치는 국제적 관점에서도 그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우리는 흔히 통일은 민족문제이자 동시에 국제문제라고 이야기한다. 한반도 분단의 근원 자체가 2차 세계대전의 종전과 미국과 소련의 대립구조에 기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통일은 국내적으로는 우리 민족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국제적으로는 냉전의 산물이기도 하다. 그로 인해 우리는 단순히 남북 두 당사국만의 관계에 의해서가 아니라,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강대국들의 이해관계 속에서 통일 문제를 이해해야만 한다.

이 때문에 통일을 위해서는 국제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가치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단순히 우리가 한 민족이기 때문에 통일을 해야 한다는 것은 앞에서도 보았듯이 내부적으로도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지 못하고 있지만, 국제사회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이제 한반도의 통일은 국제사회의 공감과 지지를 얻을 수 있는 가치 위에서 함께 논의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라는 가치인 것이다.

셋째, 민주적 가치는 통일 한반도의 미래상과도 관련이 있다. 우리가 지향하는 통일은 단순히 하나의 체제로 통합되는 것만이 최종 목표는 아니다. 우리가 희망하고 만들어가야 할 통일된 사회는 구성원들간의 대화와 타협, 관용과 소통을 기반으로 민주주의와 인권, 자유와 평등, 정의와 복지가 조화롭게 보장되는 사회이다. 따라서 통일에 대한 논의는 통일의 개념이나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넘어서서, 민주주의와 인간의 존엄을 저해하는 분단을 해소하고 그러한 가치가 온전히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어 내기 위한 민주적 가치를 중심에 두고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민주적 가치는 통일논의에서 가장 우선적이며 중요한 가치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한반도의 통일은 단지 통일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한반도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민주

였다. 사회갈등의 유형 중에선 ‘진보와 보수’ 간의 이념적 갈등이 가장 심각하다고 응답했으며(3.52점), 지역 간(수도권과 지방) 갈등(3.06점),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갈등(3.01점) 순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점은 이념적 갈등이 심각하다는 응답이 2018년 3.35점, 2023년 3.42점, 2024년 3.52점으로 점차 상승하고 있다는 점이다. 곽윤경 외, 『사회통합 실태진단 및 대응방안(XI): 이주민과 사회통합』,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 pp.63–66.

시민들의 더 나은 사회적 구조, 평화적 문화를 위한 것이어야 하며, 이런 점에서 ‘민주적 가치’에 기반한 통일논의는 그 어떤 다른 방법들보다 확실하게 통일을 실현하는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민주주의, 대화와 관용, 인권, 의견 수렴 및 토론, 다양성의 가치 인정, 평화 등을 모두 포괄하고 있는 ‘민주적 가치’ 위에서 통일을 논의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거의 80여년의 기간 동안 지속되어 온 분단체제의 구조적 모순은 우리 사회의 민주적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해 왔다. 이런 점에서 통일은 우리 사회의 민주적 가치를 회복한다는 관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국내적으로도 국제적으로도 민주적 가치에 기반하지 않은 통일논의는 통일논의 과정에서의 대화와 타협, 토론과 관용, 사회적 동의와 합의를 연계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통일 이후 구성원들의 권리와 존엄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통일논의와 실천의 모든 가치에서 민주적 가치가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통일문제와 민주적 가치는 서로를 보완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통일 문제는 민주주의, 인권, 공동체 의식, 평화와 같은 가치를 중심으로 긴밀하게 연결될 수 있다. 이에 민주적 가치를 강조하고, 민주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기본적인 권리와 책임을 함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이처럼 민주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은 시민들이 통일문제에 대한 서로 다른 시각에 대해 성숙한 자세로 갈등 해결을 위한 논의를 전개해 나가며, 통일문제에 대한 대화와 합의를 이루어나가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통일 기반으로서 민주적 가치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인가? 한반도의 통일은 분명한 역사성과 시대성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통일에 관심을 가지지 않거나 통일에 대한 공감대에 기반한 통일인식을 가지지 못한다면, 지금의 통일논의는 모두 무의미한 것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통일에 대한 논의는 통일 자체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통일을 위한 과정과 결과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실제적인 민주주의적 가치에 주목하여, 개개인의 시민윤리적 가치를 어떻게 함양하고 이를 통일논의에 연계해 낼 것인지에 대한 대화와 토론, 사회적 공감대 확산과 논의 구조의 심화라는 사회적 대화의 틀 속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는 통일이 갖는 진정한 의미가 단순히 통일된 결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통일 논의의 과정과 단계에 있고, 남북 간의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정서적 통합에 있으며, 지금보다 더 나은 평화로운 민주주의적 미래에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²⁹⁾ 이러한 점에서 통일논의에서 민주적 가치는 모든 과정과 단계들을 포괄하는 우

29) 김창근, “최근 통일의식 조사 결과에 나타난 세 가지 쟁점과 통일교육의 방향성”, 『윤리연구』 144권, 한

선적이고 기본적인 가치로 역할한다 하겠다.

IV. 통일교육의 새로운 관점: 평화와 통일, 그리고 민주적 가치의 연계

그동안 우리의 통일교육은 정부 주도로 나름의 체계를 구성하면서 다양한 내용과 수준으로 진행되어 왔다. 하지만 현재 북한과 통일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수준은 이러한 통일교육의 방식과 내용이 어느 정도 한계에 다다랐음을 보여준다. 그동안의 통일교육이 정부 주도로 당위적인 측면에서 북한과 통일문제에 대한 지식 전달이 중심이 되어 이루 어졌다면, 이제는 다양한 주체들에게 자율적인 역할을 부여하여 민주시민의 역량을 함양하고 평화와 민주적 가치를 공유하는 방식을 통해 통일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정부는 다양한 사회적 공론장을 마련하여 이러한 논의가 활성화되도록 뒷받침하여야 할 것이다.

앞서 평화와 민주주의라는 보편적 가치와 통일과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면, 이번 장에서는 이러한 보편적 가치로서의 평화와 민주주의가 통일이라는 특수한 가치와 어떤 방식으로 서로 연계되는지, 그리고 이러한 연계 위에서 우리는 어떤 통일교육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평화와 통일, 그리고 민주적 가치

먼저 평화의 가치에서 본 통일이다. 평화는 통일 한반도로 가기 위한 과정에서 필요한 비폭력적 방식의 갈등 해결, 관용, 배려, 존중과 협력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평화의 가치는 전쟁이나 체제 불안과 같은 외재적 폭력 뿐만 아니라 북한주민에 대한 이질감이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편견과 차별에서 벗어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 마디로 평화란 분단으로 인해 우리 사회 내부에서 구조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여러 갈등구조들과 같은 내재적인 폭력을 극복하기 위한 가치로서 의미를 가진다. 이처럼 평화의 가치는 비폭력적 문제해결 능력을 배양하여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도 갈등을 해결하는 것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시민의 자질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하지만 문제는 평화라는 가치가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가치로 인식되면서, 오히려 통일의 과제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는 경향이 강하다는 점이다. 즉 평화가 누구나 추구해야

할 보편적인 가치로 인식되면서 특수한 가치로서 인식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한반도적 맥락에서 우리에게 제기되는 통일의 과제와 평화의 과제가 분리되어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³⁰⁾ 하지만 우리에게서 통일과 평화라는 과제는 절대 서로 분리될 수 없는, 한 마디로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것이다.

즉 서구에서 평화는 다른 국가들과 무력 충돌 없는 ‘균형상태’를 유지하고 국가 내부에서 ‘사회구조적 폭력’을 제거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면, 한반도에서의 평화는 그 기본 개념은 유사하지만 ‘분단’이라는 특수상황을 고려하지 않고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개념이다. 즉 남북관계에서 평화를 이루어 내는데 근본적인 장애물은 분단과 그로 인해 지속되어 온 분단 구조로서, 이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결코 적극적 평화를 도모할 수 없다. 분단 구조의 지속으로 인한 우리 사회 내부의 갈등의 심화, 분단체제가 가져온 사회적 모순의 심화에서 바로 평화를 근본적으로 저해하는 사회구조적 폭력이 시작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한반도에서의 평화는 다른 나라들과는 다른 독특한 개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³¹⁾ 즉 평화라는 보편적 가치가 통일이라는 특수한 가치와 만나 한반도에서는 그 자체로 특수한 가치로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평화적 관점에서의 통일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 것인가? 평화교육은 평화적인 방법으로 갈등을 전환하기 위한 교육이며, 합의에 의한 평화를 제도화하는 수단 가운데 하나이다.³²⁾ 평화교육은 모든 시민들 사이에서 호혜성을 구축하고 시민들 간에 협력적 체제를 형성하고, 구성적으로 갈등을 해결하며, 가치를 평화 증진에 적용할 수 있는 역량과 태도, 가치 등을 교육하는 것이다.³³⁾ 이러한 점에서 평화교육은 ‘평화의 문화(culture of peace)’를 향상시키는데 그 역할이 있는 것이다.³⁴⁾

이러한 관점에서 평화의 개념을 확장시킨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통일교육을 통해

30) 정영철,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이론의 긴장과 현실의 통합”, 『북한연구학회보』 제14권 제2호, 북한연구학회, 2010, p.201.

31) 박영균, 앞의 논문, p.134.

32) 윤철기, “한반도의 인권 실현을 위한 평화·통일교육의 새로운 과제: 평화교육의 관점에서”, 『법과인권교육연구』 15권 3호, 한국 법과인권교육학회, 2022, p.74.

33) Johnson, David and Johnson, Roger, “Essential Components of Peace Education,” *Theory into Practice*, Vol.44, No.4, 2005, p. 283;

34) ‘평화의 문화’ 개념은 1989년 코트디부아르의 야무수크로에서 열린 유네스코(UNESCO) 국제회의에서 처음 제안되었는데, 이 회의에서 발표된 ‘인간 마음속의 평화에 관한 야무수크로 선언(Yamoussoukro declaration on Peace in the Minds of Men)’은 생명에 대한 존중, 자유, 정의, 연대를 통해 새로운 평화의 비전을 세워 나가자고 국제사회에 호소하였다. 이후 유네스코가 평화문화 프로젝트를 공식 사업으로 채택하며 평화교육은 평화의 문화를 구축하는 교육임을 천명하였고, 1999년 UN에서 ‘평화문화에 대한 선언’과 실행계획이 결의안으로 채택되면서 평화의 문화 개념이 구체화되었다. 홍용표, “평화문화와 지속 가능한 평화: 한국에서의 의미와 과제”, 『문화와 정치』 제5권 제2호, 한양대학교 평화연구소, 2018, pp.5-30.

문화적이고 구조적인 폭력을 제거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통일교육을 통해 외재적 폭력 뿐 아니라 북한주민에 대한 적대감,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편견과 차별, 우리 사회 내부의 남남갈등과 같은 내재적 폭력에서 벗어나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이는 비폭력적 문제해결 능력을 높여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서도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생활 속의 평화역량 강화를 포함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민주시민의 자질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하겠다.³⁵⁾ 결국 통일교육은 한반도의 안정적인 평화 정착을 추구하고, 우리 사회 내부의 또 남북주민 상호간의 존중과 협력을 추구하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분단이 가져온 구조적 갈등의 해결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필연적으로 평화교육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³⁶⁾

다음은 민주적 가치에서 본 통일이다. ‘민주적 가치’란 자유, 평등, 포용, 참여 등을 기반으로 대화와 토론, 소수 의견에 대한 존중과 배려, 사회적 연대 및 인권 존중, 사회적 합의와 타협의 원리를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민주시민’이란 주권자로서 이러한 ‘민주적 가치’를 바탕으로 타인의 존엄과 자유를 존중하고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개인의 권리를 누림과 동시에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참여하는 시민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한반도에서의 통일은 단지 통일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한반도에서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민주시민’들의 더 나은 삶의 문화, 즉 평화의 문화를 위한 것이어야 하며, 이런 관점에서 ‘민주적 가치’에 기반한 통일논의는 그 어떤 방법보다 확실하게 통일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민주주의, 대화와 관용, 인권, 의견 수렴 및 토론, 다양성의 가치 인정, 평화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민주적 가치’ 위에서 ‘민주적 방법’을 통해 통일을 논의하는 것일 것이다. 상호존중과 관용, 타협과 양보, 차이의 수용, 참여와 연대 등의 민주주의 가치와 규범은 사회통합은 물론 통일논의 과정에서의 기반이 되는 보편적 가치들이다. 특히 민주적 가치를 지닌 민주시민이 결국 통일 과정에서의 주체로서 역할하게 된다는 점에서 민주적 가치에 기반한 통일논의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민주적 가치를 함양하게 하는 것이 바로 민주시민교육이다. 민주시민교육은 시민으로서의 역량 증진과 민주적인 가치관 및 태도에 대한 교육으로 시민들이 민주주의에 관한 지식과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함양하여 공동체가 공유하고 있는 민주적 가치체계를

35) 박형빈, “도덕과 교육과정에서 통일교육과 민주시민교육 그리고 평화교육의 관계 설정 및 발전 방안”, 『도덕윤리과교육』 제67호, 한국도덕윤리과교육학회, 2020, p.100.

36) 박형빈, 위의 논문, p.115.

내면화하는 과정이며, 국가의 정치제도에 대한 이해와 함께 민주정치가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시민들의 정치참여를 유도하는 교육으로 이해할 수 있다.³⁷⁾

한반도의 통일은 단지 통일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한반도에서 살아가고 있는, 더 나아가 우리와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민주시민들의 더 나은 삶의 문화, 즉 ‘평화의 문화’를 위한 것이어야 하며, ‘민주시민주의’적 통일교육은 그 어떤 방법보다 확실하게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최선의 수단이다. 민주시민교육은 민주주의, 대화와 관용, 인권교육, 의견 수렴, 다양성의 가치 인정, 평화교육 등의 보편적 가치들을 모두 포괄하고 있으므로 통일교육과 접목될 수 있는 개념인 것이다.

이처럼 평화와 민주적 가치라는 보편적 가치와 통일이라는 한반도의 특수한 가치의 접목, 통일교육과 평화교육, 민주시민교육의 접목은 우리 시민들이 한반도의 통일과 평화를 전 지구적 차원에서 고민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의 회복, 민주주의와 다양성의 가치 등의 차원에서 생각하도록 이끌 뿐만 아니라 통일과정을 주체적으로 준비하는 능동적이고 책임있는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공동체 의식과 다양성 존중 태도를 함양하며 공감과 연대를 실천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줄 수 있다. 이는 남북한의 평화공존 뿐 아니라 민주주의적 가치의 회복과 지속을 위해 가장 절실하게 요청되는 현실적 과제이기도 하다.³⁸⁾

2.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의 새로운 방향 제안

통일과 평화, 민주주의라는 가치가 서로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를 살펴보았으니, 이제 평화와 민주주의라는 가치 위에서 한반도 통일을 지향하기 위한 통일교육의 방식, 내용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해 보자.

통일교육은 통일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와 합의를 준비하는 과정이다. 통일교육이 없이도 통일은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 통일교육이 없이는 제대로 된 통일이 이루어질 수는 없다. 통일에 이르는 과정과 통일 이후의 사회적 합의, 사회통합의 문제를 생각한다면 통일교육은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통일교육이 반드시 ‘누구는 가르치고, 누구는 배우는’ 교육의 형식을 취할 필요는 없다. 현재 우리의 통일교육 전달체계를 넘어서 우리 사회 전반적인 토론과 합의, 논의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사회적 의식을 함양하는 사회구조적 전달체계를 만들어 내는 과정 자체가 바로 통일교육인 것이다.

37) 장은주, 『시민교육이 희망이다: 한국민주시민교육의 철학과 실천모델』, 서울: 피어나, 2017, p.127; 민병기·박광기, “민주시민교육과 지속가능한 대학교육”, 『한국과 국제사회』 6권 2호, 2022, p.131.

38) 차승주, 앞의 논문, 2023, p.118.

이런 점에서 우리의 통일교육은 평화와 민주적 가치를 전제로 하며, 평화와 민주적 가치를 방법과 수단으로 하며, 평화의 유지와 민주적 가치의 함양을 목표로 해야 한다. 따라서 평화와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통일교육의 체계를 재설계하고 구조화하려는 고민과 노력이 필요하다. 적극적 평화와 완전한 민주주의는 그 완성된 모습을 그려낼 수 없는 이념형(ideal type)에 가까운 개념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지향하는 통일과 평화, 민주주의가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토론과 사회적 대화를 통해 그 내용을 충실히 구성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통일문제를 논의하는데 있어 평화와 민주적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가장 단적인 사례는 바로 지난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을 둘러싼 논쟁이다. 당시 경기를 한 달여 앞두고 단일팀 구성이 결정되자, 이에 찬성하는 입장 내에서도 무리한 단일팀 구성 방식과 절차에 대해서는 다양한 논쟁들이 전개되었다. 특히 당시 젊은 세대에서는 남북의 개막식 공동입장에 대해서는 찬성하면서도 무리한 단일팀 구성이 공정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훼손하고 불공정, 기회 박탈, 부정의 등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하였다. 이러한 과정은 남북 화해라는 대의명제 속에서 단일팀 구성이 필요한 것이 아니겠냐고 생각하던 일부 기성세대에게는 상당한 충격을 주었다. 이전에는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던 남북 단일팀 구성은 우리에게 과연 우리가 추구하는 평화와 통일이 어떤 모습인지를 고민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³⁹⁾

우리가 추구하는 통일은 보편적 가치를 올바로 수용하고, 그러한 가치들이 더 발전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한반도의 모습이다. 이를 위해서는 보다 더 크고 넓은 통일 한반도로의 상상력이 요청된다. 우리는 2018년 당시 남북 단일팀 구성을 둘러싼 비판을 통일에 대한 비판이나 거부로 해석해서는 안 될 것이다.⁴⁰⁾ 이 사건을 교훈 삼아 한반도에서 평화와 통일이 시민들의 지지와 참여로 이루어질 수 있기 위해서는 공정과 정의가 실현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가진 시민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주목하고,⁴¹⁾ 어떻게 이런 의견들을 상시적으로 담아낼 제도적 틀을 구상하는가에 중심을 두어야 할 것이다.

39) 2018년 2월 1주차 여론조사에서는 단일팀 구성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이 우세했지만, 4주차 여론조사에서는 긍정적 여론이 우세하였다. 이 사건은 국민들에게 통일과 평화에 대해 생각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평화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는 정책이 필요하며, 국민들의 한반도 문제에 대한 태도를 장기적으로 분석하는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남겼다. 박주화, “평창 동계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에 대한 (절반의) 기억”, 『Online Series』 Co 21-30, 통일연구원, 2021, pp.1-7.

40) 정영철,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평화와 통일을 위한 여정”, 『여성과 평화』 제6호, 한국여성평화연구원, 2020, p.128.

41) 윤철기, “평화통일교육의 정치적 목적과 실천방안의 재정립: 학습자의 정치적 자율성과 주체성 강화를 위한 새로운 방향 모색”, 『북한연구학회보』 제27권 제2호, 북한연구학회, 2023, p.116.

이런 점에서 상당한 시간이 흐르긴 했지만 독일의 사회협약은 지금의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1976년 독일에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제정된 정치교육의 기본 원칙인 보이텔스바흐 합의(Beutelsbacher Konsens)는 교육에서 정치적 대립을 극복하기 위해 정치적 이념과 무관하게 누구나 합의할 수 있는 ‘최소한의 합의’를 도출하였다.⁴²⁾ 이러한 합의가 가능했던 것은 교육적 차원에서 학습자의 자율성과 주체성을 보장하고, 정치적 차원에서 학습자가 정치의 주체로서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자신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인식하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 대해 서독의 교육자들 간의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최소한의 합의를 통해 교육이 정치적 양극화를 극복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반면 그동안 한국의 통일교육은 학습자의 자율성과 주체성을 충분히 보장해주지 못했으며, 또 학습자들이 정치의 주체로서 그리고 이해관계의 당사자로서 분단문제를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을 제공하지 못했다. 이러한 교육이 계속되게 되면 학습자들은 분단과 통일문제에 대해 무관심해지고 탈정치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결과적으로 이는 한반도에서 평화와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실현하기 힘들게 만들 수 있다.⁴³⁾

이에 평화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통일교육과 연계하기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우리의 상황에 맞는 통일교육의 기본 원칙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떤 방식을 통해 통일교육의 기본 원칙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낼 수 있을까?

가장 효율적이면서도 합리적인 방안은 바로 사회적 대화라 할 수 있다. 다양한 의견을 가진 시민들이 통일문제를 다루는 기본 원칙과 방법에 대해 논의하고 자신들의 의견을 조율해 나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평화와 민주적 가치를 함양하게 될 것이며, 이러한 과정 자체가 논의에 참석하지 않는 시민들에게도 자연스러운 사회적 학습의 장이 될 것 이기 때문이다. 결국 한반도의 상황에 맞는 통일교육의 기본 원칙, 통일문제를 논의하는 방식에 대한 사회적 원칙을 만드는 과정 자체가 평화·통일·민주시민적 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회적 대화는 통일교육에 대한 사회적 원칙 수립을 넘어 이후 통일문제에서

42) 합의의 세 원칙 중 첫 번째 원칙은 지식 주입 금지의 원칙이다. 가르치는 사람이 자신이 원하는 견해를 강압적으로 주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두 번째 원칙은 논쟁성의 원칙이다. 정치와 학문에서 논쟁적인 것은 수업에서도 논쟁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 원칙은 정치적 행위능력의 강화이다. 학생들은 자신의 정치적 상황과 독자적인 이해관계를 분석하고, 이에 대해 자신의 이해 관계에 따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김인의, “통일교육 교수·학습방법에 관한 연구: 보이텔스바흐 합의를 중심으로”, 서울대 윤리교육과 석사학위논문, 2019, pp.50–53.

43) 윤철기, 앞의 논문, 2022, p.79.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해법을 찾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여야 한다. 결국 우리가 새롭게 만들어가야 할 통일교육은 분단이 가져온 구조적 모순과 문제점들을 정화하게 인식하고, 통일의 필요성과 통일과정으로 나아가는 방향을 모색하고 실천하는 과정에서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고 숙의할 수 있는 공론장(public sphere)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⁴⁴⁾

이런 점에서 ‘통일국민협약’ 수립을 목표로 2018년부터 진행된 ‘평화와 통일을 위한 사회적 대화’라는 숙의의 장은 비록 그 협약안이 전국민적으로 공감을 형성해 내는 과정까지 이르지는 못했지만, 그동안 기본적인 방향에 대한 최소주의적 합의조차 쉽지 않았던 대북·통일정책에 대해 내부적 의견 수렴과 합의를 마련하려고 한 시도 자체만으로도 큰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⁴⁵⁾

이에 현재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을 중심으로 중앙부처 및 지자체, 교육청 및 각급학교, 지역통일교육센터, 전국 통일관과 협력을 통해 이루어져 오던 기존 통일교육의 전달 체계 이외에 통일부와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이 중심이 되어 기본 실행체계를 만들고 민간이 의제 선정 및 논의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의 장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평화와 민주적 가치 위에서 민주적 방법으로 민주시민의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대표적 방안은 바로 사회적 대화이다. 다양한 의견을 가진 시민들이 여러 주제를 가지고 자신들의 의견을 조율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평화와 민주시민으로서의 가치를 함양하게 될 것이며, 통일문제를 비롯한 사회의 주요 문제들에 대한 평화·통일·민주시민적 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를 위한 사회적 대화의 방법은 바로 학습과 토론이라는 숙의토론의 방식이 포함된 공론조사가 가장 적절할 것이다.⁴⁶⁾

44) 분단문제를 정치사회에만 맡겨 놓게 되면 시민들은 이 문제에서 언제나 피동적(被動的)인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 한반도의 긴장과 대립이 지속되게 되면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되는 사람들은 바로 시민들이지만 그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화하게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문제해결 과정에 자신의 이해관계를 투영하기 어렵게 될 수밖에 없다. 윤철기, 앞의 논문, 2022, p.79; 윤철기, 앞의 논문, 2023, pp.112-1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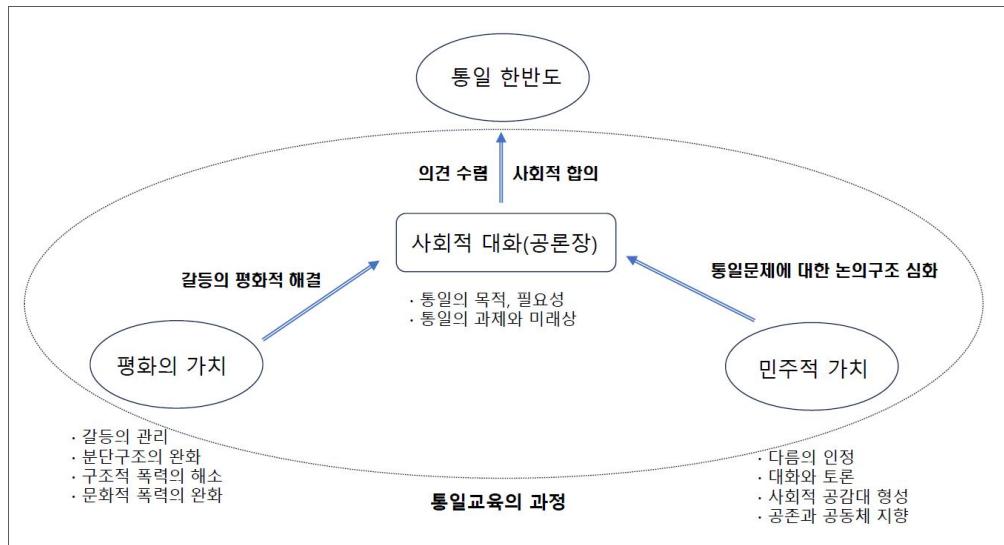
45) ‘평화와 통일을 위한 사회적 대화’는 운영주체의 자율성이거나 전문성, 의제의 적절성, 참여자의 대표성 측면에서 북한에 대한 인식이나 대북정책의 방향에 대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내는 데에는 한계가 존재하였고, 사회적 대화의 결과에 대한 과정의 숙의성이나 사회적 공론화 역시 부족하였다. 하지만 하향식으로 추진되어 오던 대북통일 정책에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한 시도 자체는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평화와 통일을 위한 사회적 대화’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권숙도(2021)의 연구를 참고하면 된다. 권숙도, “통일국민협약을 통해 본 ‘사회적 대화’의 발전방향 연구”, 『국가정책연구』 제35권 제2호,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2021, pp.87-114.

46) 공론조사란 과학적 표집방법을 통해 대표성을 갖는 시민들을 선별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이에 대해 토론하게 한 후 참여자들의 의견을 조사하는 방식으로, 한 마디로 정의한다면 숙의과정을 거친 국민여론조사라고 할 수 있다. 보통 공론조사는 1차로 일반적인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이 중 표본을 추출하여 주어진

이러한 통일논의에 대한 사회적 대화는 최소 3~4년의 중기계획을 통해 단계별 의견 수렴과 공론 확인, 그리고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새로운 통일교육의 방향은 바로 사회적 공론장으로서의 통일교육이다. “왜 우리가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통일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해답을 평화적 관점, 민주시민으로서의 민주적 가치에서 찾고, 평화와 통일, 민주적 가치를 긴밀하게 연관시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민주적 가치에 관심을 가지고 그 해결을 위해 협력하고, 편견과 차별을 극복하고 상호 존중과 관용의 자세를 지니며, 다른의 가치를 인정하고 대화와 토론을 통해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며, 집단적 결정 사항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 있는 사회적 실천의 장이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평화, 민주적 가치, 통일이라는 가치가 연계된 통일교육의 전달체계를 그림으로 그리면 다음 <그림 1>과 같다. <그림 1>을 보면, 평화와 민주적 가치는 사회적 대화, 즉 공론장을 통해 갈등의 평화적 해결과 통일문제에 대한 논의구조의 심화를 가져오고, 이러한 사회적 대화가 심화되면서 통일 한반도의 미래상에 대한 의견 수렴과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전반적인 과정 전체가 바로 통일교육의 과정이 되는 것이다.



<그림 1> 평화와 민주적 가치가 연계된 통일교육 전달체계 모형

쟁점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 학습하고 그룹별 토의를 진행시킨 후, 2차 의견조사를 통해 숙의를 거친 의견, 즉 ‘공론(public judgement)’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V. 결론

통일교육은 한반도 분단의 산물이다.⁴⁷⁾ 통일이라는 문제 자체가 한반도의 분단으로 비롯된 특수한 가치이다 보니, 한반도 분단의 산물인 통일교육은 우리만이 그 방식과 내용을 고민하고 있는 특수한 문제인 것이다. 물론 다른 국가에서도 체제의 결속을 위한 사회통합교육을 하고 있으나, 통일교육은 우리만의 독특하고도 특수한 상황이니만큼 그 속에 담을 수 있는 가치체계 역시 우리의 방식으로 고민해야 한다.

우리는 보편적 가치로서 평화와 민주주의의 의미,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문제는 이것이 통일이라는 특수한 가치와 결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평화, 민주주의의 세부 내용에 하나하나 의미, 가치, 내용을 부여하고 그것들을 통일의 과정, 통일의 내용, 통일의 미래상에 결합시키는 작업들을 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하고 다층적인 방법들이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 대화를 통해 통일교육의 가치체계 전반을 아우르는 실행체계를 만들고, 통일교육의 각 실행체계별로 이러한 가치들을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지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각 단계에서 주체들이 자율적이고 성숙한 자세로, 말 그대로 자신들의 역할을 다할 때 통일교육, 통일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러한 사회적 대화를 통해 통일교육에 평화의 가치, 민주주의의 가치를 연계해 내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연계는 평화와 민주적 가치 위에서 민주적 방법으로 민주시민의 역량을 향상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를 위해 “왜 우리가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통일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해답을 평화적 관점, 민주시민으로서의 민주적 가치에서 찾고, 평화와 통일, 민주적 가치가 어떻게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는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이 필요한 것이다. 사회적 대화를 통한 공론장 형성이 이의 모델이 될 것이다.

이제 통일논의는 단지 북한과의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 내부의 통합과 평화공존, 민주적 가치 함양을 위한 논의로 기능하여야 한다. 특히 합리적인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주요 가치들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한반도를 넘어 세계적으로 확산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사회적 공론장을 통해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민주적 가치에 관심을 가지고 그 해결을 위해 협력하고, 편견과 차별을 극복하고 상호 존중과 관용의 자세를 지니며, 다른의 가치를 인정하고 대화와 토론을 통해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며, 집단적

47) 윤철기, 앞의 논문, 2023, p.100.

결정 사항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 있는 사회적 실천의 장이 필요한 것이다. 이 논문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평화, 통일, 민주적 가치가 연계되는 사회적 공론장 형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단계별 고려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연구의 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참고문헌

- 곽윤경 외, 『사회통합 실태진단 및 대응방안(XI): 이주민과 사회통합』,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
권숙도, “통일국민협약을 통해 본 ‘사회적 대화’의 발전방향 연구”, 『국가정책연구』 제35권 제2호, 중앙 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2021.
- _____, “김정은 시대 북한 외교정책의 변화와 특징: 수정주의적 관점을 중심으로,” 『한국정치연구』 제34집 제1호,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2025.
- 국립통일교육원, 『2025 통일문제 이해』, 서울: 국립통일교육원, 2025.
- 김동춘, 『전쟁과 사회: 우리에게 한국전쟁은 무엇이었나?』, 괜주: 돌베개, 2006.
- 김범수 외, 『2024 통일의식조사』, 서울: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24.
- 김범수, “통일에 대한 인식”, 『(2025 통일의식조사) 이제명 정부 출범과 신냉전 위기: 대북정책 기대와 전망』, 서울: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2025.10.1.).
- 김병연, “평화 지향적 통일교육과 안보 지향적 통일교육의 연계성”, 『윤리교육』 제145권, 한국윤리학회, 2024.
- 김상준, “코리아 양국체제: 한 민족 두 나라 공존을 통해 평화적 통일로 가는 길”, 『한국사회학』 제52권 4호, 한국사회학회, 2018.
- 김연철, “달라진 세계, 새로운 평화·통일”, 『평화, 다시 시작!』, 6.15 남북공동선언 25주년 학술회의 및 ‘민주정부 한반도평화계승발전협의회’ 발족식(2025.6.13.) 자료집, 2025.
- 김용신, “한반도 통일과 통일교육에서 평화의 의미”, 『국제지역연구』 제27권 제1호,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2023.
- 김인의, “통일교육 교수·학습방법에 관한 연구: 보이텔스바흐 합의를 중심으로”, 서울대 윤리교육과 석사학위논문, 2019.
- 김창근, “최근 통일의식 조사 결과에 나타난 세 가지 쟁점과 통일교육의 방향성”, 『윤리연구』 144권, 한국윤리학회, 2024.
- 나종석, “민족주의와 세계시민주의: 자유주의적 민족주의를 중심으로”, 『헤겔연구』 26호, 한국헤겔학회, 2009.
- 민병기·박광기, “민주시민교육과 지속가능한 대학교육”, 『한국과 국제사회』 6권 2호, 2022.
- 민주평통, 『통일 여론·동향(2023년 2분기)』, 서울: 민주평통, 2023.
- 박영균, “남북의 통일원칙과 통일과정의 기본가치: 민족과 평화”, 『시대와 철학』 25권 2호(통권 67호), 한국철학사상연구회, 2014.
- 박주화, “평창 동계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에 대한 (절반의) 기억”, 『Online Series』 Co 21-30, 통일연구원, 2021.
- 박형빈, “도덕과 교육과정에서 통일교육과 민주시민교육 그리고 평화교육의 관계 설정 및 발전 방안”, 『

- 도덕윤리과교육』 제67호, 한국도덕윤리과교육학회, 2020.
- 윤철기, “한반도의 인권 실현을 위한 평화·통일교육의 새로운 과제: 평화교육의 관점에서”, 『법과인권교육연구』 15권 3호, 한국 법과인권교육학회, 2022.
- _____, “평화통일교육의 정치적 목적과 실천방안의 재정립: 학습자의 정치적 자율성과 주체성 강화를 위한 새로운 방향 모색”, 『북한연구학회보』 제27권 제2호, 북한연구학회, 2023.
- _____, “평화통일교육의 새로운 콘텐츠 개발: 국가폭력 역사와 ‘기억의 정치’를 중심으로”, 『도덕윤리과교육』 제86호, 한국도덕윤리과교육학회, 2025.
- 장은주, 『시민교육이 희망이다: 한국민주시민교육의 철학과 실천모델』, 서울: 피어나, 2017.
- 정영철,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평화와 통일을 위한 여정”, 『여성과 평화』 제6호, 한국여성평화연구원, 2020.
- _____,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이론의 긴장과 현실의 통합”, 『북한연구학회보』 제14권 제2호, 북한연구학회, 2010.
- 조정아, “2030 세대의 통일의식과 통일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통일교육연구』 제15권 2호, 한국통일교육학회, 2018.
- 차승주, “교과서에 나타난 통일담론에 대한 고찰-민족주의를 중심으로”, 『윤리교육연구』 제29집, 한국윤리교육학회, 2012.
- _____, “‘민족주의’적 통일교육의 한계와 대안: 세계시민주의의 관점에서”, 『평화학연구』 제24권 제3호, 한국평화연구학회, 2023.
- 채진원, “민주시민교육과 통일교육의 관계모델 탐색: 관계유형과 사례논의의 시사점”, 『한국과 국제사회』 제7권 제6호, 한국정치사회연구소, 2023.
- 통일부 통일교육원, 『평화·통일교육: 방향과 관점』, 서울: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8.
- 홍용표, “평화문화와 지속가능한 평화: 한국에서의 의미와 과제”, 『문화와 정치』 제5권 제2호, 한양대학교 평화연구소, 2018.

- Galtung, Johan., “Violence, Peace, and Peace Research,” Journal of Peace Research, Vol.6, No.3, 1969.
- Galtung, Johan., Peace, Research, Education, Action, *Essays in Peace Research*, Vol.1, Copenhagen: Cristian Ejlers, 1975.
- Johnson, David and Johnson, Roger, “Essential Components of Peace Education,” Theory into Practice, Vol.44, No.4, 2005.

“방점 잘못 찍은 ‘힘에 의한 평화’... ‘이려다 전쟁’ 불안감만 고조”, 『경향신문』(온라인), <https://www.khan.co.kr/article/202411112144005>(검색일: 2025.10.21).

【Abstract】

A New Perspective on Unification Education : How Should Peace and Democratic Values Meet Unification Education

Kwon, Sookdo

The recent change in people's perception of unification shows that the existing unification discussions and unification education did not play a role properly. Therefore, we need to once again explore how the universal values of peace and democracy should be combined with the special values of unific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through social discussions on unification and education.

After exploring the implications of peace and democratic values in unification discussions, this study proposed social dialogue in a new direction of unification education in which peace, unification, and democratic values can be linked. Unification education that we should create should be a public sphere where we can accurately recognize the structural contradictions and problems brought about by division and participate and deliberate through peace and democratic values in the direction of the need for unification and the unification process.

Unification education is the process of preparing social consensus and consensus for unification. Unification can be achieved without unification education, but proper unification cannot be achieved without it. In this respect, it will be necessary to think and make efforts to redesign and structure the system of unification educ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peace and democracy.

Key Words : Unification education, peace education,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peace and unification,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social dialogue

• 논문투고일 : 2025년 10월 31일 / 논문심사완료일 : 2025년 11월 20일 / 게재확정일 : 2025년 11월 20일

